

이 대통령, 한노총 만나 ‘노동 3권 보장·양극화 해소’ 강조

간담회 열고 노동계 의견 청취
“양극화 문제, 힘의 균형 회복해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제도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해 마련했다. 대통령이 한국노총 위원장뿐 아니라 회원조합 위원장들까지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

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을 향해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반짝하고 마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넘어서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산업현장 안전 문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대형빵집 상속세 회피 악용” 보완 지시

중기부에 상속세 인하 타당성 살피고
가업·기업 상속 비교해 제도보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제청장

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설명을 듣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제과점업도 해당된다. 최근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늘고 있는데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 묻고,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예시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에 대해 지적했다”며 “중기부 장관에게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 1일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

자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그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watv.org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는 새 언약 유월절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 희생을 기억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代贖·죄값을 대신 치름)하신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그 위대한 희생이 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 유월절에 그 해답을 담아두셨습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것(포도주)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17~28절)

**새 언약 유월절은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 보혈의 축복을 ‘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이 당신의 구원과 영생으로 완성되는 자리,
2026년 새 언약 유월절 대성회에 초대합니다.

참가문의 031-738-5999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지킨 새 언약 유월절
유월절(逾越節)은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으로 성력 1월 14일(음력 3~4월경) 저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며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는 새 언약으로 세우셨다. (출애굽기 12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6장)
국내외 400만 성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 유월절을 성경 원형대로 복원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키고 있다.

유월절 더 알아보기